

- ▷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이륜차 포함), 수소차 1만 280대 보급
- ▷ 도심 배달용 화물차, 미래차 전환 본격 추진으로 미세먼지 저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10일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주)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조명래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천여 대가 보급되었으며,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

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